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내달초 착공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들어설 올림픽플라자가 10월 초 공사에 돌입한다.

도 동계올림픽본부는 29일 “기본설계를 맡은 대림산업이 지난 25일 올림픽플라자 사업계획을 도에 신청했다”며 “이번 주 기본설계가 제출되는 대로 적정성 심의를 거쳐 곧바로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폐회식장은 평창올림픽을 상징하는 시설들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두 차례 압축이 유찰되며 적기 완공에 비상이 걸렸었다.

대림산업 사업계획서 제출 공기단축 위해 실시 설계와 시공 병행 2017년 9월 완공 목표 일정 빠듯 - 도 사업대상지 부지 확보 총력

기본설계 후 곧바로 시공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공기 단축을 위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능하게 됐다.

설계와 시공 책임을 맡은 조직위원회는 우선 토목공사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에 착수, 2017년 9월

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때듯한 공사기간이다. 201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일정을 역산해 공기를 맞췄기 때문에 돌발 변수라도 생기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대상지역의 부지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에는 국유지 32필지와 공유지 72필지,

사유지 40필지가 편입돼 있다.

도는 이 가운데 국유지 20필지(5,431㎡), 사유지 32필지(1만8,459㎡), 도개발공사 부지 3필지(6만1,151㎡)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개발공사 부지는 5년간 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에 나선다. 또 올림픽플라자 영구시설물 내에 포함된 강개공 부지 중 2만1,488㎡(감정액 39억원)에 대해서는 도가 소유한 춘천 석사동 구 공무원교육원의 토지·건물과 교환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성현기자 sunny@

올림픽 지방채 '4000억 이상' 재정악화 우려

뉴스 분석

**도, 총 3400억 육박 예상
강릉 600억·평창 200억
재정 건전성 강화책 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원도와 개최 시·군이 총 4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는 29일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총 34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릉시가 600억원, 평창군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도와 개최시군의 올림픽관련 채무가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도는 내년에 총 1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은 1000억원으로 경기장과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 투입된다.

2017년에도 부족한 재원 메우기 위해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는 9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에 따라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의 75% 이상

올림픽 주요예산 투입 내역

- 강원도
 - ▶경기장·경기장 진입로 1000억
- 강릉시
 - ▶올림픽 경기장건설 150억
 - ▶올림픽 지원도로 101억
 - ▶철도 부담금 200억
 - ▶올림픽 아트센터 162억
- 평창군
 - ▶올림픽 진입도로 100억
 -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100억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75%선 을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에 없던 개·폐회식장 건설과 함께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던 용평 알파인 스키장, 알펜시아 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경기장에 대한 보강공사도 불가피 해 재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림픽 개최 시·군도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기반 시설 준비 등을 위해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150억원, 올림픽 지원도로에 101억원, 철도 부담금에 200억원, 올림픽 아트센터에 162억원 등 올림픽 준비를 위해 총 613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강릉시는 내년에 420억원, 2017년에 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평창군도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올림픽 진입도로에 10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에 1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의 도와 개최 시·군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상환 만기일이 되는 2020년부터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사채 차환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도 문제다.

강원도는 2016년 만기도래하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공사채 5150억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차환(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차환은 사상 최대 규모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액 9767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행자부가 5150억원에 대해 차환을 100%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강원도개발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동계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원장수 도의회 재정건전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림픽 준비를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재정이 새는 곳을 미리 막지 않으면 도와 개최 시·군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세워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청년 초급기술자 배치 실효성 없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대상·도내 업계 부실 우려 지적

청년고용을 위해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반드시 청년 기술자나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는 정부 계획이 시작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총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에 반드시 청년 초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청년기술자를 새로 고용한 업자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건설업자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2% 이상이면 0.1점, 3% 이상이면 0.2점, 4% 이상이면 0.3점이 추가 부여된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안에 회의적이다.

우선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제외하면 5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도내 발주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500억원 이상 공사가 발주되더라도 영세한 도내 건설업체들이 타시도의 대형 건설사에 밀려 공사 수주 가능성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영세한 도내 건설업체보다 청년기술자의 고용이 쉬운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청년 초급 건설기술자들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부실 공사도 우려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도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내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에 불리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기술자가 관리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은복 rio@kado.net

4분기 공공·주택시장 전망

“11兆 물량 쏟아진다” 수주경쟁 치열

● 공공시장

중심제 시범사업 등 몰려
도로·철도공사 최대 5.5兆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감축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전면 시행 등으로 4분기 공공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사할을 건수주전에 나선다.

특히 남은 석 달, 최대 11조원에 달하는 대형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발주 또는 입찰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연말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29일 <건설경제>가 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발주기관의 4분기 발주



및 입찰 집행계획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발주기관별로 지난 3분기까지 계획 대비 120% 이상의 조기 집행(발주)실적을 거둔 곳이 있는가 하면, 대형공사는 아직 채 1건도 집행하지 못한 기관도 있다.

하지만 중심제가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발주자마다 시범사업을 비롯한 대형공사 발주를 서두르고 있어 연말 공사입찰 집중현상은 예년보다 더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도로와 철도, 공공주택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3분기까지 발주에 부진했던 도로공사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최대 3조2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건설공사 17건을 쏟아낼 계획이다. 이 중에는 중심제 시범사업 13건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4건은 기술제안입찰 방식이다.

입찰일정상 낙찰자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물량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벌써부터 수주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올 들어 가장 모범적인 조기발주를 추진한 철도공단의 경우에는 4분기에도 최대 16건,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입찰(발주)을 집행할 방침이다.

중심제 대상은 2건으로 내달 초 중순 각각 개찰을 앞두고 있으며

턴키공사(이천~충주 6, 8공구 제외)도 4건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및 중견건설사의 경우 올해 계획했던 수주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1~2건 정도의 대형 철도공사 수주는 필수항목이라 여기고 투찰전략을 수립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4분기에만 최대 46건, 3조90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 입찰을 준비 중이다.

대부분 공공아파트 건립공사로 대형사보다는 중견 및 중소건설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다만 중심제 5건과 대형개발방식도 18건(나머지 23건은 최저가)이 포함돼 있어, 실적 못지않게 리스크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홍승권·채희찬기자 skbond@

▶6면에 계속

발주처 ‘甲질’ 계약 근절 기재부, 제도 개선 착수

국토부 이어 정상화 작업 팔걸어... 법적·제도적 대안 초점

국토교통부가 주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뿌리뽑기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을 선정하고 현재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2면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담 삭감, 불공정 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면 기재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달리 기재부는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다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소관 부처인 만큼 법적,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또 국토부 산하 4대 발주기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발주기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먼저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개선방안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발주처 '甲질' 계약 근절... 기재부, 제도 개선 착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계약법령을 이원화하고 발주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계약예규 손질도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는 '발주기관 계약관행 정상화 TF(태스

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TF에는 연구기관과 학계 등의 국가계약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계약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는 만큼 기재부의 TF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불공정 사례가 폭넓게 수집된 만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면서 "면밀한 자료 검토를 거쳐 연말께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NEWS &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기재부 역할 중요

예산 확보 최우선 합리적 제도 개선

'공사비 부담 삭감' 뿌리뽑기 위해 필수

건설사, 발주기관과 대등한 지위 확보

국토교통부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가 내놓는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등 모든 발주기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결국 추가 예산 확보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선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재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은 국토부의 그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업무 영역이 다른 만큼 기재부는 국토부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은 대부분 공사비를 삭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따른 예산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다.

실제 국토부가 마련한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도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 쓰는 처지다.

기재부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주지 않는다면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게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깎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불공정 관행을 고치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가 필요한 예산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개정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건설사가 거래 과정에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기재부가 풀어야 할 문제다.

국토부와 달리 기재부는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발주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서 국토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도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추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 기재부의 노력이 동반돼야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확실하게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